

민주 전대 흥행대박 '모바일 투표' 총선 경선에도 도입되나

# 위력 입증... 여야 모두 관심 선거구 확인 불가능 장애물

한명숙 대표 "낯은정치 타파"... 박근혜 위원장에 협조요청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 도입된 모바일투표가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목전에 닥친 총선 경선과 대선후보 경선에도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경선은 대의원(2만1124명) 투표 30%와 당원·시민선거인단(76만5719명) 70%를 반영해 치러졌다. 선거인단에 신청한 시민은 63만7719명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 12만8000명의 약 5배에 이르렀다.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 참여자(51만3214명)의 93.2%(47만8385명)가 모바일을 통해 투표했다. 모바일투표자 수가 현장투표(3만4829명)의 13.7배였다. 투표를 면에서도 모바일투표는 84.4%였지만 현장투표율은 20.8%에 그쳤다.

때문에 모바일투표는 후보의 당락은 물론 순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모바일투표는 '그들만의 리그'였던 전당대회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선호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점에서 일부에선 '모바일혁명'으

로 해석했다.

모바일투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선이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경선에 나타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모바일투표 성공을 계기로 4월 총선 경선과 12월 대선후보 경선에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17일 오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희가 공천을 할 때도 모바일선거를 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나라당 비대위도 모바일투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아직 선관위에서 모바일의 공정성에 대해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장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모바일의 힘을 확인한 만큼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결립들은 현재의 선거법과 정보통신법 아래에서는 총선 경선에 모바일

투표의 도입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복지 예산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신규로 추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비에 지방비를 더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지방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연도별 복지 예산은 지난 2005년 3014억원에서 올해 9821억 원으로 최근 7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2005년 1831억원에서 올해 6444억원으로, 252%가 증가했고, 지방비도 948억원에서 3018억원으로 3배 이상인 2070억원이 증가했다.

복지예산 중 30% 이상이 지방비 부담이라는 점이 자치단체 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지난해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7.5%로, 전국 평균 51.9%를 밑돌지만,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꾸준히 늘어나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복지사업의 증가와 확대에 따른 국고지원에 비해,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사업의 증가와 확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면 지방재정이 거덜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과 고

# 지방비 부담 7년새 2070억원 '폭증'

■ 광주시 복지예산 얼마 생활수급자·노령인구 등 타 지자체보다 비을 높아 2005년의 3배.. 재정 위기



강원태 광주시장 등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국비 지원 확대 등 5건의 현안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 복지예산 연도별 재원현황 (단위: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3,014	3,834	4,945	6,173	6,952	8,214	9,207	9,821	
국비	1,831	2,363	3,102	4,082	4,485	5,370	6,241	6,444	'05년 대비 252% 증
지방비	(60.7)	(61.4)	(62.7)	(66.1)	(64.5)	(65.4)	(67.7)	(65.6)	
분권교부세	235	257	272	270	300	303	337	359	'05년 대비 53% 증
지방비	(7.8)	(6.7)	(5.5)	(4.4)	(4.3)	(3.7)	(3.7)	(3.7)	
자체재원	948	1,224	571	1,821	2,167	2,541	2,629	3,018	'05년 대비 218% 증
지방비	(31.5)	(31.9)	(31.8)	(29.5)	(31.2)	(30.9)	(28.5)	(30.7)	

※ 자체재원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임.

특히 광주와 전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 인구 등 복지 수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부담은 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수급자 비율에 따른 국고지원이 요구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과 고

령인구 비율 등의 지역실정을 감안해 기초 노령연금과 의료급여의 국고보조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전액 국비지원, 기초생활보장 80%에서 90%, 영유아 보육비는 50%에서 80%로 상향 조정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 "DJ-친노 결집 없으면 총·대선승리 없다"

민주통합 지도부 호남권 유일 최고위원 박지원

17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박지원 최고위원의 얼굴은 밝았다. 4위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임명했지만 유일한 호남권 최고위원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오히려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4위로 지도부에 진입했다. 성적에 아쉬움이 있다.

▲악전고투였다. 힘들었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경선에서 지지를 보내준 호남 민심에 감사한다.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운함이 있었을 것이다.

▲소이부담(笑而不答)으로 같을하고 싶다. 통합 과정에서 비통합파로 매도당하는 등 상황이 최악이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했다.

-결과에 만족한다는 것인가.

▲과거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민주당의 수위라고 하겠다'는 마음에



"호남지역 야권연대 박원순 선출방식으로"

변화가 없다. 내가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호남세

조가 거론되고 있다.

▲당면한 현실이다. 부인할 수 없다. 짧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들이 나타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으로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정치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크는 것이다. 수많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 정국에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은 어떻게 보는지.

▲일부에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호남 민심의 결집이 없으면 총선 승리도, 대선 승리도 없다. 서울과 수도권, 심지어 영남에서도 호남 민심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이다. 부산, 경남 등 낙동강 전선에서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도 호남 민심의 결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친노 세력이 민주통합당을 장악했다는 평가도 있다.

▲DJ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았고 DJ의 정신은 역사 속에서 살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화학적 결집과 통합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DJ와 친노 세력,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

-4월 총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가 도입되는가.

▲시민의 참여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미 공천권은 시민에게 넘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공천물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지역 야권연대에 대한 논란도 크다.

▲과거 민주당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은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호남지역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호남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선수가 많다고 물갈이 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지역 민심이 교체될 요구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정치인으로서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cdu.ac.kr

# 2012학년도 편입생 모집

**모집인원**  
일반편입학 : 211명 (사회복지학과 외)  
학사편입학 : 65명 (간호학과 외)

**원서접수** (인터넷 및 창구)  
2012. 1. 2(월) ~ 1. 27(금)

**장학혜택** (전체학과 대상)  
전형료 및 입학금 면제, 매학기 장학금 50만원 지급

**입학상담**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초당대학교 교무처 입시계 Tel. 061-450-1013~4

##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전 초당대학교

**초당대학교**

## 빛의만평

- 김종두

남자처럼, 말이 아니게 됐다